

불량출판물 추방에 나선 사회단체들

가두캠페인, 고발센터, 상담실 운영 등 활기... “청소년 차단해야”

날로 심각해지는 불량도서공해

퇴폐적인 불량출판물이 범람하는 유해독서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불량출판물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윤리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10월25일에는 서울YMCA·서울YWCA·한국소비자연맹·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회·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특히 서울YMCA는 강남지역에 청소년유해출판물고발상담실(542-4075)을 설치하고,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일반도서·잡지·만화는 물론 팜플렛·포스터 등 모든 인쇄매체에 대해 방문·우편·전화·고발을 받아 해당출판사에 시정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맡고 나서 주목된다.

YMCA고발상담실의 한봉희씨는 “불량출판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25일 상담실 문을 연 이래 하루평균 두세건의 고발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힌다. 그중에는 포르노소설을 읽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한 후 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한 남자고등학생도 두명이나 됐고, 일간지에 실린 여성지광과의 선정적인 문구들에서부터 영화광고·만화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들이 불량한 내용으로 고발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한 남성 고발자는 “저질의 일본만화 해적판을 들여 놓지 않으면 손님이 없어 가게경영에 타격을 입을 정도”라고 하소연하며 불법지하출판사들의 만화대본소장악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 윤리위원회의 88년도 3/4분기 심의결정 현황을 보면 심의 대상에 오른 4,216건 중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총 231건(도서 52건, 주간신문 12건, 주간잡지 77건, 월간잡지 30건). 특히 잡지의 경우, ‘스스로 뜨거운 여자가 되라’ ‘밀봉 보너스북-아름다운 섹스를 위한 발라드’ 식의 성적 기교를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는 기사와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량출판물의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시적인 단속이나 법적 조치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단체들의 활발한 추방운동은

하나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 뿐 아니라 ‘사이비종교단체의 내막’ ‘카바레의 실태’ 등 그럴듯한 제목의 기사 역시 실상은 흥미분위의 폭로물로 치달고 있음을 윤리위원회 심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재대상에는 「주간 경향」 「선데이 서울」 등 익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문제잡지’도 있지만, 근년에 창간된 「건강다이제스트」 「유머 펀치」 「월간 걸」 「러브러브」 「부부라이프」 「로맨스」 등의 월간지들이 최근 사회전반의 자유화분위기를 틈타 문자 그대로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리위원회의 具賢書부장은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전체 불량출판물의 규모에서 보자면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오른 책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불법지하출판물에 당달아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 나온 출판물들에도 퇴폐적인 풍조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생 25%... “음란도서 접촉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량출판물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가는, 최근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에서 서울시내 및 과천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중고등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량출판물 접촉실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센터의 한명섭씨는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수가 음란, 외설출판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배경을 밝혔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24.5%가 음란도서 및 만화·도색잡지를 보고 있으며 선정적 광고(35.5%)·음란도서와 도색잡지(23%)·음란만화(20%) 순으로 접촉하고 있다. 접촉시기는 중학교때가 67.7%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학교 4~6학년(12.5%)·국민학교 1~3학년(2.5%)때 접촉했다는 응답도 적



불량도서를 추방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들이 가두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지 않아 충격적이다. 접촉장소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듯 음성적인 장소가 아니라 학교(32%)와 집(25%)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만화가게(15%)·친구집(14%) 순이었다. 불량출판물을 보게 되는 동기로는 ‘호기심’(46%)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기 때문에’(36%)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출판물의 구입가격으로는 500~3000원대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량출판물에 접촉하게 되는 원인은,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마음만 먹는다면 싸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량출판물을 보고난 후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72.2%)가 대부분이지만 ‘자위행위를 했다’(17.5%) ‘음주·흡연·본드흡입’ ‘본 내용을 모방했다’ ‘직접 성행위를 했다’(각각 1%)는 대답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시민감시운동 더욱 활성화해야

그렇다면 이러한 유해독서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부층에서는 법이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단호한 근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불법출판사들의 소재와 유통구조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법적인 조치를 동원했다가는 오히려 더욱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회단체를 통한 시민감시운동과 더불어 건전한 독서교육으로 청소년 자체의 저항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최근들어 각종 사회단체들이 불량출판물

추방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고발 및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가 하면 모니터클럽(서울YWCA 만화모니터클럽)과 어머니독서지도교실(전국주부교실중앙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 및 고발 접수된 사항이 구체적인 힘을 가진 운동이나 감시기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불량출판물의 추방은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1일 YMCA정규토론회에서 「향락산업과 매체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진 李重漢씨(서울신문논설위원)는 “우리 사회 전체가 향락문화 속에 젖어 있는 현 시점에서 퇴폐적인 불량출판물의 문제만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단순사고만을 요구하는 임시준비에 쫓겨 국어교과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상황으로는 불량출판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저항력을 함양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량출판물이라는 암세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알박한 상업주의에 대한 자제는 물론 학부모·사회단체·교육계·정책당국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춰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에 또다시 이르게 된다.

—오에리 기자